

+ 조준상 ·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결정과 향후 전망



갈림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온 파행의 연속이나, 종 지부를 찍고 새해를 맞을 것이냐. 한나라당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절차에 대한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엇기적인 결정이 낳은 지형이다. '절차는 위법인데 그 산물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현재의 결정은 그 자체가 엇기다. '무효'라고 선언하는 게 당연한데, 그 알량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다시 국회에 공을 넘겨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다시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개무시' 하는 태도로 일관하지만, '위법한 절차'라는 무게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게다가, 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들이 당연히 상정됐어야 할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이라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개무시' 전략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본다'는 창조적(?) 해석까지 해야 할 판이다.

돌이켜 보면, 언론법 개정의 시작은 그 자체가 '거짓말'로 시작됐다. 그때 이를 앞장서 추진했던 장본인인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대기업이나 신문사들도(급속도로 영향력이 해체되고 있는) 지상파 진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해제한다고 해도)"며, "여론이 집중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상위 거대 3개 신문이 종합편성채널을 한 개씩 나눠 갖는다느니, 종편은 누구, 보도전문채널은 누구, 홈쇼핑채널은 누구 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안 준 신문이 정권한테 등을 돌릴 테니 뭐든지 주긴 준다는 얘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애초의 거짓말은 그동안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웅변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12월 언론노동자의 1차 파업, 올해 2월 2차 파업, 그 저항의 산물로 탄생돼 3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활동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의견 무시, 이어진 7월 언론노동자의 3차 파업, 7월 22일 위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 처리과정, 그리고 처리 절차에 현재의 위헌 위법·위헌 결정 등 한 마디로 '근거 없는 일방통행'에 대한 사회적 저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실관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처리된 법안들을 폐기하고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는 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기존 언론법 처리안에 대한 폐기법안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이 이를 언제까지 외면할지는 알 수 없다. 언론법은 한나라당 자신에게도 '양날의 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에서 방송뉴스채널을 합법적으로 설립하는 순간, 한나라당은 이들 신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조중동에게 방송뉴스채널을 넘겨주는 언론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순간 MB는 탄핵을 면했다'는 저자거리의 분석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력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사찰,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 폭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 등 '치안 독재'와 '언론 장악'이다. 다른 하나는 현 정권에 대한 '조중동'의 엄호 사격이다. 이 엄호 사격이 비판으로 돌아서는 순간, 현 정권의 권력 유지는 매우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은 온갖 무리수와 불법을 무릅쓰고 언론법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중동'에 성의를 보였다. '조중동'으로선 현 정권에 대한 엄호 사격을 중단할 수 없다. 하지만, 온갖 무리수와 불법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게다가, '조중동'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요청하고 있고, 현 정권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난데없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이나, 주류광고와 의료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채널연번제를 도입해 종합편성채널에 황금채널을 배정하겠다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방송계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송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영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국회에서 지상파방송과 견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온갖 특혜를 어떻게 축소하고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재논의 하는 것, 이것이 현재 결정이후 한나라당이 보여야 할 책임 있는 태도이다.

자신에게도 그리 나쁘지 않은.